

2015년 업무보고  
국가혁신 분야

---

# 정 부 혁 신

---

2015. 1. 21.(수)

관계부처 합동



# || 목 차 ||

## 1. 정부3.0

1-1.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 .....	1
1-2. 공공데이터 개방, 민간활용 극대화 .....	2
1-3. 정부 기능·구조 혁신 .....	4
1-4. 정부운영 협업 촉진 .....	5
1-5. 일하는 방식 혁신 .....	7
1-6. 정부3.0 확산 및 변화관리 .....	8

## 2. 인사혁신

2-1.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.....	9
2-2. 전문성 제고 및 인적협업 증진 .....	11
2-3. 직무·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.....	13
2-4.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 .....	15
2-5.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.....	16
2-6.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.....	17

## 3. 지방자치 혁신

3-1. 공동체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 .....	18
3-2. 지방자치 20년 평가 및 국정운영 협력 강화 ....	21
3-3. 지방재정 구조 개혁 .....	23
3-4. 지방규제 혁파 .....	25
3-5. 근본적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.....	28



# 1. 정부3.0

## 1-1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

◇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,  
정부가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

### □ 정부가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

- 「임신-출생-취업-사망」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제적 제공
  - ※ (임신·출생) 임신확인시 무료건강검진, 출산용품 지원 등 통합 안내  
(취업) 집중상담, 경로설정, 취업알선, 직업훈련 등 지원  
(사망) 금융거래·토지·차량 재산조회, 유족연금·사망일시금 등 일괄 연계
-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 등록시 수혜서비스 신청없이 지원
  - ※ 전기요금·TV수신료·통신요금 감면('15.상반기), 상하수도 요금 등 추가 연계('15.12월)

### □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처리

- 창업·육아·생활민원 한 번에 해결
  - 영업·폐업신고 간소화,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확대
  - 유아보육·교육 정보 통합 제공, 육아관련 신청서식 통합
  - 전세확정일자 온라인 확인, 여권·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
-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없는 공공서비스 제공(O2O)
  - 민원신청과 수령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-오프라인 연계 전달체계 구축
    - ※ (예) PC, 모바일 기기로 원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후 방문하기 편리한 관공서에서 서비스 수령

### □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 확대

- 정책 설계, 이슈발굴, 집행단계까지 '정부3.0 국민디자인단' 활동 가속화
  - \* ('14년) 정책 설계 → ('15년) 이슈발굴·정책설계·집행
-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투표 활성화, 온라인 참여포털 구축, 매뉴얼 보급, 법제화 등 추진

- ◇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방하고,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

※ 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 : 현재 12위('13년) → 목표 5위('17년)

## □ 데이터 개방과 일자리 창출 연계 촉진

-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
  - ※ 미래부, 중기청, 특허청, 금융위 등과 특허출원·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
-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 과감히 정비
  -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, 활용실적 공개

## □ 「데이터 빅뱅」 프로젝트 추진

- 국민이 직접 선정\*한 고가치, 대용량 데이터 개방 추진(~'17년)
  - 부동산·상가·건강·교통 등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집중 개방
    - \* 기업 및 학계,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한 민관합동TF에서 선정
-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, 물류·의료 등 530종의 데이터베이스(11억건) 개방
  - 매일 업종별, 지역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제공
- 민간 수요가 높은 여러 기관 핵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고도화
  - ※ 주차장·도시공원 등 11개 완료, '15년 중 30개 표준 추가제정

## □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확대

- 정보공개 청구 없이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확대
  - (대상기관) 전 시군구·교육청까지 공개('15.3월)
    - ※ (현행) 133개(중앙, 시도, 시군구(69)) → (확대) 484개(시군구 158, 교육청 193 추가)
  - (대상범위) '완전공개' 문서에서 '부분공개' 문서까지 공개('15.1월)

## 참고

## 2015년 데이터 개방 주요내용

구분	분야명 (개방 규모)	개방내용
1	부동산 종합정보 DB (680만건)	토지(임야)정보, 공시지가, GIS통합정보*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개방 * 전국 680여만개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
2	전국 상가 DB (270만건)	SKT, 네이버, BC카드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, '15년까지 상가데이터 오류율 5% 절감, 상가좌표, 전화번호 등 개방
3	국민건강정보 DB (1,600억건)	진료·투약·검진 등 개인건강정보(PHR) 오픈 API 제공('15 대형포털→'17년 점진적 확대), 건강표본DB(비만, 치과 등) 15종 구축·개방
4	농수축산물 가격 DB	농축수산물 경락·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, 오픈API 9개 구축,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
5	지자체 행정 DB (11억건)	음식점, 세탁소 등 주민생활 밀접 인허가 데이터 530종을 창업활동 정보로 제공·활용
6	건축행정시스템 DB (680만건)	건축물 도면·유지점검·사용정보·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,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
7	등산로·국가생물종 DB (650만건)	'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(603개 → 3,368개)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,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(447만개 → 650만개)
8	교통정보·교통사고 DB (50만건)	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, 스쿨존 등 사고다발 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, 돌발정보, 안전 정보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
9	실시간 수도정보 DB (5,000만건)	전국 수도물 공급 전과정(취수장→수도꼭지)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('17)
10	수산물 DB	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·재고·수입,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

◇ 지속가능한 정부 발전을 위해 현재의 기능·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, 정부조직의 현장성 및 성과 제고

## □ 기구·인력 최적화 및 현장중심 조직개편

- 정부가 ‘할 일과 버릴 일’을 구분, 핵심역량 위주로 부처 기능 조정
  - ※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「정부조직혁신단」 구성, 추진
- 부처 간 연관기능을 진단하여 부처 기능 최적화
  - 유사·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, 기관간 칸막이 제거 등 도모
- 일선 집행기관(지방청·사무소 등)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편
  - 중간감독 기능 축소 → 본부 및 현장 서비스 강화
  - 광역화 등 지방청·사무소간 기능조정

## □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 체계 개선

- 신설기구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제 도입, 일정기간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정규조직 여부 결정
-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로 성과 중심 조직모델 확산
  - 대민 점점 서비스기관 대상 책임운영기관 대폭 확대\*
    - \* ('14년) 39개 기관 → ('15년) 45개 기관으로 확대

## □ 정부위원회의 대폭 정비 및 실적공개

- 실적이 저조\*한 부실 정부위원회를 대폭 통합·폐지하고,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정기 공개
  - \* 연간 회의실적 2회 미만인 경우 등 20% 내외 정비 추진
- 정부위원회 정비과정에 관계전문가·시민참여 적극 활용
  - ※ 위원회 정비계획 발표('15.2월), 후속조치 법령 개정(연중)



◇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다부처 서비스 연계 및 협업사례 확산, 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의 업무시스템 마련

### □ 다수부처 서비스 연계·통합 추진

-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하는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
  - 취업정보, 중소기업지원 등 시급한 9개 서비스 분야를 우선 추진
- 민원24, 정부대표포털(korea.go.kr), 수혜서비스시스템 통합
  - 2만여 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가능

### □ 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업무시스템으로 전환

- (클라우드) 기관별로 분산된 업무시스템(온-나라)과 지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,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접속·활용
  - ※ ('15년) 시스템 구축 → ('16) 단계적 확산 → ('17) 전부처 전환 완료
- (빅데이터) 정부 데이터를 지도화하여 융합 분석 등 과학적 정책결정\* 확산
  - \* (예)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 분석
- (제3센터) 전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추진  
(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)

### □ 협업사례 확산 및 기반 마련

- 고용·복지·문화·창조경제 등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'고용복지+센터'를 협업 혁신모델로 확산('14년 10개→ '15년 30개)
  - ※ 복지·재난분야 협업 체제 재구축
- 협업조직의 법령상 독자성 근거 마련, 인사·예산·성과평가에 협업형 제도 도입

### □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

- 대학, 협회, 단위조합(농협·수협·신협) 등 대상기관의 참여 확대
-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47종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 1,450종의 이용 활성화 추진

## 참고

## 다수부처 서비스 연계 분야 (’15년 추진)

※ 분야별 시스템 수는 변동 가능

분야명	관련 시스템
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	워크넷(고용정보원), 나라일터(인사처) 등 44개 시스템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	창업넷(중기청),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(미래부) 등 19개 시스템
유아보육·교육 정보 통합서비스	보육통합정보시스템(복지부), 어린이교육마당(교육부) 등 7개 시스템
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	국가재난관리통합시스템(안전처), 재난정보공동활용 시스템(안전처) 등 14개 시스템
긴급전화 통합 서비스 제공	119다매체신고시스템(안전처), 122 상황관제시스템(안전처) 등 8개 시스템
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	형사사법공통시스템(법무부), 성범죄자신상등록시스템 (여성부) 등 60개 시스템
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 창구마련	소비자상담시스템(공정거래위원회), 소비넷시스템 (한국소비자원) 등 28개 시스템
법정부 행정공간정보 개방 지원	생활지리정보시스템·3차원생활지리시스템(지자체) 등 24개 시스템
정책정보 통합제공	예비군통지시스템(국방부), 건강보험관리시스템(건강 보험공단) 등 23개 시스템

## 1-5

## 일하는 방식 혁신

- ◇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, 대기중심의 업무관행을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전환,

### □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 구현

- (모바일) 스마트 기기로 전자문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- ※ 공개 문서에 대해 모바일 결재 추진('15.2월)
- (메신저) 공무원 전용 활용으로 업무연락 및 자료공유의 보안성 강화
  - ※ 공무원용 모바일 메신저 '바로톡' 시범운영('14.12월) → 확대('15.4월)
- (스마트워크) 출장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용 확대
  - 고속버스 터미널 등 교통요지 추가 구축, 서울청사 등 좌석이 부족한 센터의 시설 확충
- (영상회의) 이용활성화\*를 통해 정부기관의 지리적 분산 극복
  - \* ('13년) 13,452회 → ('14년) 31,092회 → ('15년) 4만회

### □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정부업무총량 줄이기

- 여러 부서, 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업무절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, 행정정보 공유, 서식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량 감축
  - 복지·재난안전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한 분야부터 집중 개선
    - ※ 기관별 업무량 감축사례 경진대회 실시, 우수사례 확산 등

### □ 초과근무, 휴일대기, 보고관행 개선

- 관행적 초과근무, 눈치보기식 휴일대기를 엄격히 개선하고, 주 2회 가족사랑의 날 정착
- 해외출장과 연계한 연가활용 인정 등 개인의 자율적 연가사용 제고
- '결재판 없는 보고', '수첩 없는 회의' 등 보고 및 결재 관행 개선

⇒ 행자부가 일하는 방식 혁신의 모범부처가 되어 타 기관 선도

- ◇ 정부3.0의 가치를 정부 내 착근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, 대국민 접점기관으로 정부3.0 확산

## □ 정부3.0 맞춤형 전략 강화

- 정부3.0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
  - 국민관점 지표 재설계\*, 우수사례 배점 강화(50%→70%)
    - \* (예) ('14년) 데이터 개방 건수 평가 → ('15년) 민간의 데이터 활용률 평가
  - 평가 대상기관 확대(479개→534개),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
- 중앙·자치단체·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
  - 정부3.0 컨설팅단 구성(2월), 보통·미흡 기관 수준 향상 지원
- 우수 기관 '인센티브 패키지(인력+재정+포상)' 및 개인 포상 확대

## □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으로 확산

-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드는 '내고장 정부3.0' 추진
  - 지역특색에 맞는 체감도 높은 선도과제(50개) 선정, 성과 확산
- 정부3.0 모범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선정 및 집중육성
  - ※ 기관 공모·선정(2월) → 역량진단(3월) → 컨설팅(3~6월) → 성과진단(12월)
- 권역별 현장토론회, 벤치마킹 투어,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

## □ 국민 속으로 확산

- 수요자 니즈(needs)를 고려, 타겟별(연령·계층) 전략 차별화
  - \* 방송·극장(쏠연령층), SNS(20~30대), 접점기관(지역주민, 주부 등)
- 지역·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홍보 강화
- 파급력이 큰 매체를 집중 활용하는 전략적 홍보
  - \* 대중매체(TV, 라디오, 일간지) 및 대중교통·전광판, 온라인 등 활용

## 2. 인사혁신

### 2-1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

◇ 국민인재를 공직에 적극 초빙하고, 공무원(국민의 인재)도 민간 등에 진출하여 쌍방 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

#### □ 전직급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 도입

-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스카웃하기 위해 채용절차 간소화 및 임기(5년) 제한 완전 철폐
  - \*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고공단 가등급(실장급)에서 나등급(국장급)까지 확대
  - \* 현재는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5년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
-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'경력개방형 직위'로 개편
  -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의 경우 일률적인 지정(現 20% 범위) 대신,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
- '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·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:5로 조정
-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\* 및 채용규모 확대
  - \* (현재) 직무분야(1~3명 선발) → (개선) 직무군 또는 직렬(직류)단위
- 인사혁신처 주관 '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' 시범 실시
  - 전산·법무·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군 또는 직렬(류)별 선발

#### □ '스펙초월' 국민인재 열린 채용 여건 조성

- 중소기업·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 채용 확대를 추진하여 '스펙초월 채용시스템' 활성화
-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

## □ 국민인재 추천제 등 다양한 국가인재 적극 발굴

- 국민,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(농업·문화 등)에 숨은 인재를 추천 받아 국가인재DB에 등재, 분야별 인재 풀 확충
  - \* 직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추천은 이해관계에 따른 추천, 추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인재DB 수록 및 활용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
- 재난 등 국민안전, 여성·이공계 등 소수 분야 인재 및 해외동포·방한 외국리더 인물정보 발굴

## □ 장애인·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

- (장애인) 공채 구분모집 확대,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 30개 이상 발굴
- (지역인재)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7·9급 선발 확대(7급 105명, 9급 150명)
- (지방인재) '15년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
  - \*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 일정비율(5급20%, 7급30%) 미달시 추가 선발
- (저소득층) 9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 확대(1→2%)
- (공익기여자) 6급 이하 채용시 의사자 배우자·자녀에 가점 도입 추진

## □ 공무원의 민간분야·국제기구 등 진출 확대

- 민·관 상호 노하우 공유 위한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
  -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(대기업 등 포함) 및 직급(4~7급→3~8급) 완화
    - \* 민간근무 실적 공개·적격성 심사 등 강화로 민관유착 소지 사전 차단
- 국익기여 직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진출 확대
  - 복귀시 전문경력 고려 보직 부여, 성과와 연계한 진출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
    - \* 새마을 운동, 전자정부 등 개도국 확산 전파

## □ 공직관·국가관 검증 등을 위한 채용시험 개선

-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'헌법' 추가
  - \* 일정점수(예 : 60점) 이상 취득한 경우 Pass / Non-Pass제로 운영
-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'한국사' 가점제(만점의 5%내외) 실시
-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방식 및 평가체계 개선

- ◇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공무원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양성

### □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순환보직 개선

- 환경, 안전 등 전문성 필요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직위 4년, 전문직위군(동일분야 직위의 群)내 8년간 보직이동 제한
  - \* 예 : (전문직위군) 재난안전분야 / (전문직위) 위기관리, 자연·사회재난대응 등
  - \* '14.7월 기준 전문직위 비율 : 중앙부처 본부 직위 11.7%
-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전문성 필요 직위 (예 : 인사, 홍보 등)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
-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(1~2년)을 확대 (예: 2~3년)하여 잦은 이동 제한
  - \* (법령상 전보제한기간) 고공단 1년, 과장급 1년6월, 4·5급 이하 2년
  - (실제 동일직위 재직기간) 고공단 1년, 과장급 1년2월, 4·5급 이하 1년8월

### □ 인사 등 전문직렬(또는 직류) 신설 및 전문성 제고

- 인사,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직렬(또는 직류) 신설
-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와 주기적 인사교류를 통해 '통인재'로 양성
  -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인사분야부터 선도
  - \* 예) (인사업무) 인사혁신처 ↔ 부처 인사담당, (홍보업무) 문체부 ↔ 부처 홍보담당

### □ 통인재·창조인재 구분 관리 기반 마련

-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'통인재'와 보다 넓은 전문분야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'창조인재'로 구분 필요
  - \* (통인재) 예산통, 금융통, 재무통, 인사통 등 전문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등
  - \* (창조인재) 넓은 시야와 분석력으로 정책결정 등 관리자 역할
- 통인재(전문가형)·창조인재(통섭형)에 맞게 계급·급여·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'Y자형 경력개발제도' 도입기반 마련

## □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도입 추진

- 직위 현황을 고려하여 직책단계를 3~4개로 그룹화하고, 직책단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·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을 세부적으로 구분\*
  - \* 한 계급에 9~10년 재직하는 5급과, 직책단계와 맞지 않는 4급(과장급 및 과장보직 없는 4급)을 세분화하여 개편하는 방안 검토
- 직책간 이동 및 승진은 「능력과 성과」 중심 운영
  - (직책단계 내 이동) 능력 우수자는 2개 이상 상위 계급 직위에도 발탁 임용
  - (상위 직책단계 승진) 역량평가 등 엄격한 자질 검증을 거쳐 승진 임용

## □ 부처 칸막이 제거·협업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

- 전 직급·전 기관으로 인사교류 대폭 확대\*
  - \* '04년 84명 → '10년 196명 → '13년 598명 → '14년 1,369명 → '15년 2,700명
  - 국정과제·협업과제 중심의 '전략교류(「국·과장+담당」 패키지 교류)' 추진
-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신설
  - 현행(부처, 자치단체, 공공기관·대학·연구기관) → 민간(기관·단체) 포함
  - 현행(개인에게만 인사·보수 상 우대) → 기관 포상 신설

## □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인사제도 개선

- 성숙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지자체 핵심 인재 양성 및 직급별 역량평가제 도입
  -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활성화,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병행 추진
    - \*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시범도입('15.하반기) 후 단계적 확대
- 법제·금융·경제·지역개발 등 전문 직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별 인사교류 확대



◇ 성과에 따라 제대로 평가·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 계급 중심 인사관리를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 개편

### □ 연공·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를 성과·역량 중심으로 개편

- 현행 '점수' 및 서열화 체계를 '등급제'로 개편 검토, 승진시 경력 점수 반영 축소(現 5~30%)
  - 소속기관장·부서장 등에게 승진임용의 재량권 확대
  - 성과평가지 부서장 면담 의무화, 평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시스템\* 마련
- \* 공정평가지수(연공서열·성별 등에 의한 편향성 여부) 및 관대화 평가지수 등 활용

### □ 성과우수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, 성과미흡자 역량개발 지원

- (성과우수자)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, 성과급 및 연봉액 등 급여 확대 지급
- \* 우수한 6급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역량 평가를 거쳐 5급 속진임용
- (성과미흡자) 전문성 교육 실시, 직무 전환 배치 등 역량개발 지원

### □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 및 명예의 전당 설립 준비

-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을 '대한민국 공무원상'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확실하게 인사상 우대하여 동기 부여 및 자긍심 제고
- 특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「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」을 설립, 헌액 대상 공무원의 공적과 동영상 및 사진자료 등을 전시

### □ 공무원 장기능력 개발체계 도입

- 경력개발체계(Y자형)에 적합한 직종·직급별 맞춤형 교육 강화
  - 지식 습득·개인학습·퇴직준비 등을 위한 연수휴직(1~2년) 등
  - \* (현행) 국내·외 대학원 등에서의 연수(해외유학 보수 50%, 국내 연수 0%) → (개선) 대학원 등 + 어학·자격증 취득 등 개인학습(연수목적에 따라 추가지급 검토)
- 직무연구회(공무원 연구모임) 활성화
  -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직 내외 협업(공동연구) 촉진

## □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개선

- 現 적격심사제도의 실질화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엄격관리
  - 일정사례의 경우 반드시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
    - \* 예 : 행동강령 위반, 감사 등 주의·경고 누적,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
  - 무보직 사유·기간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성과형 보직관리 확립
  - 동일 직무등급에서의 최대 재직기간(예시: 가등급 5년, 나등급 8년)을 설정하고, 기간 도래시 근무성과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력 요건 강화
  - \* 예 : 3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자

## □ 관리능력(리더십) 향상 교육 확대

- 국·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대상 승진(보직) 전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리더십 특화교육을 위한 중공교 「리더십 스쿨」 개설
  - 역량평가 결과 개인별 부족 역량에 대한 심화학습
  - 국·과장 수행시 실제 필요한 리더십(성과관리, 멘토링 등) 중점 교육



- \* 민간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적극 활용
- 개인 수요에 따라 특정 역량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「개별 역량 맞춤형 과정」 및 민간위탁 리더십 교육과정(사이버·모바일·집합) 개설

## □ 공무원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책 추진

- 승진 및 교육기회 확대, 전문가 양성 위한 보직관리 등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
- 위험직무 재해율(사망, 부상 등)을 활용하여 위험등급 및 지급액을 차별화 하고 高위험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
-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현재 수준('14년기준 : 84.3%) 이상 개선 추진

◇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권위주의 문화 타파 등으로 인사혁신의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

### □ 무사안일·복지부동 등 공직 ‘7대 폐습[가칭]’ 개선

- 조직문화에서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공무원 인식과 행태 개선
  - \* (예) 계급 중심의 권위주의, 무사안일(책임전가), 복지부동, 형식주의(red tape) 등
- 기관장 인식 제고를 위한 ‘인사혁신지수(가칭)’ 조사·공표
  - \* 7대 폐습실태, 인사운영 공정성, 복무만족도, 일과 삶의 균형 등 측정

### □ 일 잘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부규제 감축·폐지

- (인사혁신처) 각 기관 자율적인 인사혁신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
  - \* 인사법령 하향 조정(시행령→지침 등), 인사 내부규제 감축으로 각 기관의 자율성 제고
- (각 기관) 위임된 자율성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혁신계획 수립·추진

### □ 일과 삶의 균형

- 부처별로 직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자율 결정하고, 미사용연가를 이월·저축하여 장기휴가(안식월)로 활용
- 유연근무제 유형 통합·단순화(7개→4개) 등 자기주도 근무여건 조성
-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확대 실시
  - 부서(국·과)별 시간외 근무시간 사용량을 예산처럼 일상 관리하여 불필요한 근무 감축(구 안행부·고용부·여가부 등 5개기관 '14년 시범실시)
- 노조의 사회적책임 제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확립
- 육아휴직시 업무대행 지정,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
- 남성 육아휴직기간 확대(1년→3년), 업무대행수당(월 5만원) 인상 추진 등

- ◇ ‘100세 시대’와 연금수급연령 조정(60→65세)에 대비하여 퇴직 후에도 사회공헌 등을 통해 공무원 전문성 활용 확대

## □ 공무원 퇴직 후 사회공헌 지원

- 공직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교육 실시, 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체계적 지원
  - \* (전직교육) 퇴직 전 재취업 등 전직 위한 실용적 교육 이수 강화
  - \* (사회공헌 프로그램) 기술인력 양성사업, 지자체 행정자문, 개도국 개발경험 전수 등
- 전담기구로 ‘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(가칭)’ 설치
-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조기퇴직 고위공무원을 전문성 활용 가능한 직무로 재배치,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해 공직내 우수인력 활용 여건 조성

## □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명확화

- (심사기준)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
  - \*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분석 및 분야별·직종별·기관별 취업심사기준 마련
- (사후관리)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\* 운영방안 마련, 취업제한 위반자 적발·조치 등
  - \*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·기간·직위 등을 매년 공시

## □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적극지원 및 정년연장·임금피크제 여건 조성

-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적극 지원
- 「공무원연금법」 개정안 통과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 만전
-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·임금피크제 도입방안 검토

◇ 엄정한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

### □ 신상필벌 원칙 확립

- 고의·계획적 비위는 엄중처벌 하도록 징계기준 강화, 직무관련이 없는 단순 과실 비위에 대해 과감히 관용 조치
- 복무점검 및 기획점검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
  - 정보·보안 관련 복무점검을 강화,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을 상시화하여 비위자 처벌 외에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병행

### □ 공직비리 일벌백계

- 음주운전, 금품비리, 성폭력 등은 원아웃제 확대
- 주요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, 직무관련 범죄, 일탈 행위 등 공직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
- 공직비위 감사·감찰 결과에 대한 대외 공표를 활성화하여 예방효과 제고 및 공직사회 근본적 의식변화 유도
  - \*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

### □ 공직가치 및 헌법적 가치교육 강화

- 공무원 교육체계를 확대·개편하여 공직가치 및 헌법적 가치교육 강화
- 공직자의 헌법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 등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지원
  - \* 해외파견 공무원교육(국립외교원), 통일미래지도자 과정(통일교육원), 60만 장병 정훈교육(국방홍보원)

### □ 연간 감사·감찰 계획 및 결과 전면 공개, 비리 예방 강화

- 지방감사·공직감찰 주요내용 공개로 재발 방지, 익명비리신고(행자부 홈페이지, 하모니 청렴관리 코너) 적극 활용 홍보
- 반복적 주요 민원사례 분석 등 사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는 음성적·관행적 비리 차단

### 3. 지방자치 혁신

#### 3-1 공동체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

◇ 자치제도 정착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

##### □ 주민이 참여하는 「공동체 모델」 확산

-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각종 공동체 사례 유형화 및 성공·실패요인의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마련
  - 지역 산업형, 공유 경제형, 문화역사형, 안전형, 복지형, 생활 정비형 등
- 공동체 모델별 전문화된 리더 육성 및 각계 의견수렴과 성과 공유를 위한 ‘공동체 회복 국민포럼\*’ 구성
  - \* 공동체 리더, 학계·현장전문가, 지자체 담당자,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
- 우수 공동체 모델 선정 및 시상, 아이디어 공모전, 현장 활동가 토론회 등 주민 참여형 전국단위 ‘공동체 대축제’ 개최

##### □ 공동체 설립·운영 기반 조성

- 참여·협력·나눔의 공동체정신 확산과 주민 상호간 신뢰와 유대 제고를 위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\* 제정 추진
  - \* 정부·지자체 역할, 정책수립 원칙(다양성·자율성·주민자치), 공동체 리더 교육 등
- 공동체 관련 정책 연계, 주요사업 평가,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‘5년 단위 종합계획’ 수립 및 (가칭)‘공동체발전위원회’ 구성
- 공동체 정책을 통한 주거환경·일자리·주민참여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‘주민행복지수’ 개발
- 부처별 분산 추진 중인 공동체 관련 사업\*이 지역차원에서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공동체 전담 조직 설치 추진
  - \* (농식품부) 농촌체험휴양마을, (해수부) 어촌체험마을, (환경부) 자연생태마을, (행자부) 정보화마을, (산림청) 산촌생태마을 등

## □ 마을·사람·일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(마을기업) 지역 향토·문화·자연자산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·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('15년 140개)
  - 박람회·마을기업 마트 등을 통한 유통기반 확대, 성공·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업종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추진
- (골목경제) 거주자·상인 등 주민이 주도하는 '골목 공동체' 형성('15년 10개)
  - 현황조사, 공모사업을 통해 명품 골목경제 선정 및 재정지원
- (전통시장)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\*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개발
  - \* '13~'14년 부산강통시장,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에 더하여 '15년부터 부여 백제 야시장, 목포남진 야시장 및 경주 신라 야시장 추가 조성 중
- (마을공방)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'공방'을 설치('15년 9개), 지역 기업과 연계(MOU 체결)하여 협동적·지속적 일자리 창출

## □ 주민 밀착 조직 개편

- 주민 감소 지역 2~3개 면사무소를 통합하여 1개 행정면(行政面)으로 운영, 유휴 청사는 주민 복지 등에 활용
- 행정계층 중층화(시·구·읍면동, 3계층)로 인한 비효율 개선을 위해 대동(大洞) 실시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읍면동제 추진
- 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 확충\*하여 읍·면·동 집중 배치
  - \* '17년까지 4,823명 / '11~'14년 4년간 7,000명 既 확충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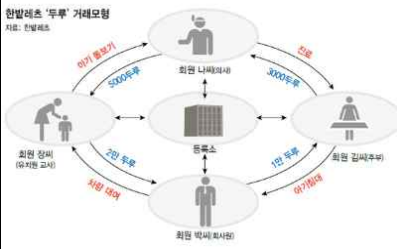




## □ 주민편의 향상 및 일상생활 불편 해소

-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중립적인 경계조정기구 설치
- 국가기초구역에 기반한 새 우편번호('15.8월) 정착 지원, 원룸·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(동·층·호) 부여로 정확한 주소체계 부여



## 참고

## 공동체 주요 사례

유 형	주요 사례 및 성공 요인	
지 역 산업형		<p>▶ 도릉골 촌집 이야기(강원도 태백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의 금광 폐갱도를 활용하여 묵은지 사업 및 산채재배, 전통한과사업,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</li> </ul> <p>⇒ 공동체 경제 활동을 통해 주민소득 · 일자리 창출</p>
공 유 경제형		<p>▶ 한발렛츠(대전시 대덕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서비스 등 지역화폐를 다양한 재화사용과 연계</li> </ul> <p>⇒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공동체 경제권 형성</p>
문 화 역사형		<p>▶ 북촌 한옥마을(서울시 종로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이 운영하는 행정사무소 설치</li> </ul> <p>⇒ 지역정체성을 살린 고유 문화자원을 보존·활용</p>
안전형		<p>▶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(대구시 달성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주변 공공시설, CCTV위치, 가로등 미설치지역 등 표시</li> </ul> <p>⇒ 주민이 안전문제 직접 진단,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난대응체계 마련</p>
복지형		<p>▶ 참새방앗간 마을(경기도 시흥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공동육아 및 일자리 창출</li> </ul> <p>⇒ 육아·보육, 고령자 재교육 등을 공동체에서 수행</p>
생 활 정비형		<p>▶ 주민주도의 그린빌리지 마을 조성(전북 진안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들이 함께모여 스스로 꽃길 조성, 쓰레기 치우기, 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을 개선</li> </ul> <p>⇒ 주민주도 하에 지역의 환경정비 및 생활의 질 향상</p>



◇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·진단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준비하고, 통합적 국정운영을 위한 중앙·지방 협력 촉진

## □ 지방자치 20년 종합평가 및 청사진 제시

- 주민 삶의 질, 행정 효율성, 주민 참여, 중앙·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 분야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
  - 지자체, 지방4대협의체, 지방자치발전위원회,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참여를 통한 종합적·다면적 평가 추진
- 20년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, 바람직한 자치거버넌스 구상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대·내외에 공표
  - ※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(10.29)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 선포

## □ 지방 조직·인사·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

-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 재배분
  - (보강분야) IT, 법제, 금융, 문화재, 외자유치 및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
  - (감소분야) 국토개발, SOC, 농·수산업 등
-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
  - 복수 직급제 도입, 부단체장 직급 현실화 등 직급체계 개선
  - 직급별 역량평가제 단계적 도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
-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체계 정비
-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'단체장-의회 대립형' 기관구성 방식을 인구규모·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
-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입여건 및 지출구조 전반 검토

## □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

-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, 시·도 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
-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원칙적 참여 제한
- 의원 징계 시 의정비 감액제,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
- 지방의원 연수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

## □ 통합적 국정운동을 위한 중앙·지방 협력 강화

- (협력 시스템)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·협의를 하는 「중앙-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」 법령상 기구로 신설
  - 중앙-지방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정책 이행력 확보
- (국정협력 촉진) 우수 지자체 국책사업 선정,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, 법적 의무 불이행 지자체에 페널티 강화
- (지방사무 배분) 지방사무를 신설하는 제·개정 법령에 대하여 사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‘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’ 도입
  - ※ 사무 구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제·개정 법령 사전검토 협의체 구성·운영
- (인사교류) 중앙-지방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소통·협력 증진

## □ 사회적 갈등·분쟁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

- (사전 인지) SNS, 언론, 여론동향, 빅데이터 등 분석을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 파악, 선제적으로 대응
- (전문가 중재) 전문가로 구성된 ‘분쟁닥터제’ 도입을 통해 갈등 조기 해결, 중앙분쟁조정위원회·행정협의조정위원회 기능 강화

◇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모든 정보의 전면 공개,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기반 구축

### □ 재정 운용실태 분석 및 통합공개시스템 마련

- 과도한 수요예측 등에 따른 재정지출 비효율·낭비 사례\*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익구조 분석·공개
  - \* (예시) 종합운동장, 박물관 등 적자 재정운영 사례
- 지자체, 지방공기업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별로 각기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비교·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 구축
  - 지방교부세 감액, 재정분석 결과, 지방세 체납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지자체별 순위를 매겨 비교 공개

### □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자원배분제도 개선

- 재정수요 현실화 등 보통교부세제도 개편
  - 지역균형발전, 복지 등 국민적 수요 반영, 자체수입 확충 노력 인센티브 강화, 법적·의무적 경비의 예산반영 촉진 등
-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·광역시와 자치구간 자원배분 기준 개선
- 지역상생발전기금의 50%를 적립('19년까지 1조원)하여 지자체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
- 유사·중복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원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

### 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강화

-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91.5조원\* (연간 재정의 58%) 조기 집행      \* '14년 대비 8.9조원 증가
  - 일자리, 서민생활 안정, SOC 국고보조사업 집행 집중관리

## □ 지자체별 재정능력을 고려한 재정관리 실시

- 지자체별 세입·세출 및 가용재원 분석, 재정능력별 관리체계 마련
- 장래 재정수요에 대비, 자금의 일부를 적립·기금화하는 방안 마련
- 세출절감·세입증대 지원을 위한 '지방재정 컨설팅단' 운영

## □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

-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 '지방재정영향평가' 실시 및 투자사업의 모든 단계를 '이력관리'
-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중심 위원회에서 선정, 매년 성과평가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
-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모델 구축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강화

## □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강화

- 비과세·감면 축소('17년 15%), 과세구분체계 개편 등 지방세 특례 정비
- 과세자료 공유 확대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징수 강화
-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거나, 현행 과세물건과 유사함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발굴·과세 추진
- 지방세 과세표준의 단계적·연차적 현실화 추진
-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및 납세자 의식 제고

## □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

- 지방세외수입 관리대상을 확대하고,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징수실효성 제고
- 체납·징수 등 운영현황을 진단·공개하여 인센티브와 컨설팅 제공
- 행정처리 비용보다도 낮은 수수료·사용료 및 장기간 미조정된 지자체 부담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

◇ 적극적인 현장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, 자치법규의 법령 합치성 제고

### □ 지방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

- 지자체, 기업,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,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하는 「규제개혁 끝장토론회」 지속
  - 관광, 접경지역 등 규제 유형·지역별로 토론회 개최
- 지자체 규제 정도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여 자율경쟁 유도
  - 지방규제 지수 측정·공표\*, 지방 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등
  - \* 기업이 느끼는 ‘규제체감도’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순위와 등급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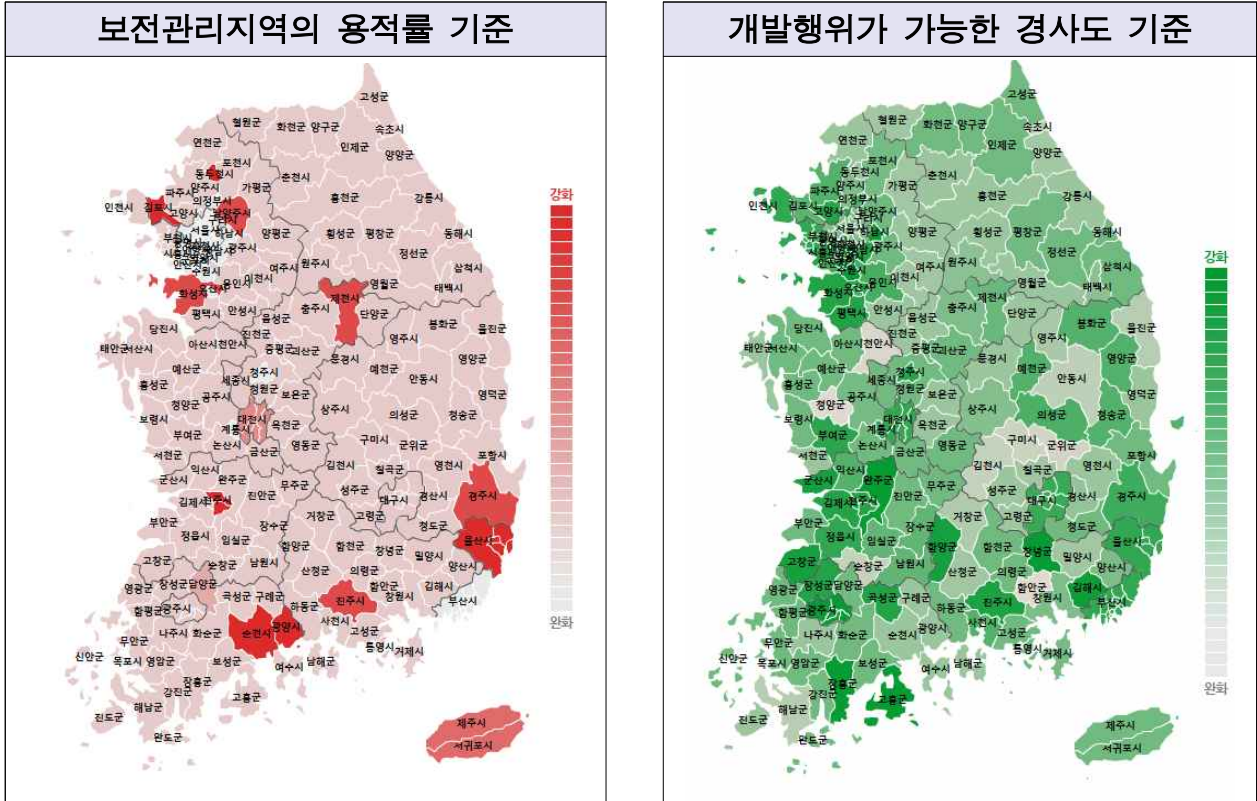
### □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법령 합치성 제고

-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, 상위법령 위반 여부,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 추진
  - 법령 제·개정사항 지자체 전파, 전 지자체 조례 점검(‘15년 55개)
  - 조례 정비체계 구축 및 지자체 법규 정비담당 전문인력 확보
-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법령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활성화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

### □ 공무원의 적극적 규제개혁 동참 유도

- 규제 개혁에 따른 법령위반, 징계 해당 여부 등을 사전 컨설팅
  - 법령해석, 현장확인 등 부처협업을 통해 해법 제시 후 감사 면제
- 적극행정 면책, 소극행정 문책을 확대하는 지방감사 실시

< 지자체 별 규제 편차 비교화면 >



\* 색이 진할수록 규제 정도가 강하고, 색이 연할수록 규제 정도가 약함

< 지역별 규제 종합정보(65개 항목) 제공 화면(예시) >

인제군

공장 55개 (개별 48개, 산업단지 0개, 농공단지 7개)

강화

보통

완화

공강 55개 (개별 48개, 산업단지 0개, 농공단지 7개)

토지활용도

개발행위 허가

개발행위 허가면제

지방도시계획위원회

타지역비교

기업맞춤검색

+ 묻고답하기

토지활용도

건 폐 물	공업지역	전용공업(%)	70%이하	공 업 지 역	전용공업(%)	150%이상 ~ 300%이하	TOP	
		일반공업(%)	70%이하		일반공업(%)	200%이상 ~ 350%이하		
		준공업(%)	70%이하		준공업(%)	200%이상 ~ 400%이하		
	관리지역	보전(%)	20%이하		관리지역	보전(%)		50%이상 ~ 80%이하
		생산(%)	20%이하			생산(%)		50%이상 ~ 80%이하
		계획(%)	40%이하			계획(%)		50%이상 ~ 100%이하
	산업단지		80%이하		공업지역의 산업단지	전용공업(%)		—
						일반공업(%)		—
	농공단지		70%이하		농공단지	준공업(%)		—
								150(도시지역 외)
가설건축물		허용층수	3층 이하	준지기간		3년 이내		
		추가규제	없음					
사용승인 검사면제		규정 유무	규정불비	규정내용		—		

□ 금전부담 조례정비

○ 서민·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 경감, 영세사업자의 사업편의 촉진

- \* (사례1) 법령에서는 주유소·주차장 등의 진·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완화(토지가격의 0.02)되었으나,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례(토지가격의 0.025) 정비(도로점용료 징수 조례)
- \* (사례2) 작업장(사무실)의 면적제한 없이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, 연면적 9.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한 조례 정비(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)
- \* (사례3) 법령에서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, 이를 정하지 않은 조례 정비(공유재산 조례)

□ 생활불편 조례정비

○ 지역주민 주차장 활용도 제고 등 주민 불편 해소

- \* (사례1)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법령과는 달리,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조례 정비(주차장 조례)
- \* (사례2)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법률(60일 이내)보다 단축한 조례(30일 이내) 정비(지하수 조례)

□ 규제신설 조례정비

○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

- \* (사례1) 주차요금 체납 시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외에 체납차량의 운행까지 제한하는 조례 정비(주차장 조례)
- \* (사례2) 공공시설 내 매점·자판기 설치허가가 한번 취소된 자는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례 정비(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조례)



◇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모든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### □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과 기능 재정립

- 유사 공사·공단 통·폐합, 설립요건 강화, 퇴출제도 마련 등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추진
- 직영기업(상·하수도 등)·공사·공단 등 유형 및 기능 재정립
-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고, 평가체계 일원화
  - ※ 전원 외부 전문가(9명)로 구성된 ‘지방공기업 혁신단’ 운영

### □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

- 사업 구조조정, 자산매각,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사 부채 지속 감축
  - ※ 26개 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 매년 10%p씩 감축('17년 120% 목표)
-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도시철도, 상수도, 하수도는 경영개선, 요금 적정화를 통해 구조적 적자 요인 개선
  - ※ 요금 현실화율('13년) : 도시철도 59.9%, 상수도 82.6%, 하수도 35.5%

### □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의 합리적 경영 지원

- 인사, 예산, 회계 등 운영지침 마련 및 경영실적평가 제도 시행
- 기관의 규모별·유형별 경영평가 모델 개발, 기관장 평가지표 개발
- 출자·출연기관별 조직·인력 운영 및 경영상태 등 통합공시 실시